

주간 통일정세

2015-3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측 비정치화 요구 8·15 공동행사 가로막아”(8/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논평에서 “민족통일대회와 관련하여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이 서로 접촉을 가지고 통일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그런데 괴뢰패당이 비정치화 따위를 운운하며 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이것은 공동행사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이어 “8·15는 어머니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적 경사의 날”이라며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진행하려는 공동행사는 응당 자주통일의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함.
-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평양서 예배…반북행위 속죄(8/3, 우리민족끼리TV)
 - 우리민족끼리TV는 3일 임현수 목사가 전날 평양 봉수교회 일요 예배에 참석해 “국가전복 음모를 기도한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속죄했다”고 보도하고 임 목사의 ‘회개 동영상’을 공개함.
 - 동영상에 따르면 임 목사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공화국에 죄를 진 죄인으로서 참회하기 위해 나왔다”며 자신이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반국가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함.
 -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에 대해 인민의 뜨거운 충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며 “동족대결이 아니라 겨레의 화합과 나라의 통일을 우선시하는 애국 목사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임.

- 북한 “임현수 목사 자백, 강요나 압박 의한 것 아니다”(8/4,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대답에서 “남조선괴뢰들은 마치 범죄자의 진술이 그 누구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해 대며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벌여놓고 있다”고 반박했다며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임현수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남한 정부와 언론들이 ‘부당 억류’, ‘강제 자백’이라고 지적했다며 “괴뢰들의 이러한 망발은 뒤가 썩은 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더하여 임 목사의 ‘적대행위’ 배후에는 남한과 미국이 있다며 “뒤가 썩고 제발이 저런다고 진실을 오도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자기 범죄를 더 크게 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함.

- 북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군사 보복 초래할 것”(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 강행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의 엄중한 군사적 보복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논평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전쟁사환군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로 규정했다.
 - 이어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이 연습이 ‘방어적’, ‘정례적’, ‘공개적’이라며 범죄적 성격을 약화시키려 한다면서 “전형적인 북침공격연습, 핵시험 전쟁으로서 침략성과 반동성을 절대 숨길 수 없다”고 강조함.
 - 논평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조선반도 핵문제 관련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것의 군사적 표현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물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산림과학원 “금강산 소나무 통상적인 병해충 피해”(8/7, 연합뉴스)
 -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 방북한 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이 금강산 일대 피해 소나무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한 결과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병해충의 정확한 명칭도 나왔지만, 통일부가 향후대책과 함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산림전문가들의 공동조사나 약재지원 방침 등이 결정된 뒤에 통일부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북한 “이희호 여사 방문, 6·15 정신 되새기는 계기”(8/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6·15의 정신을 되새겨준 뜻깊은 방문’이라는 글에서 “6·15의 길을 따라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은 하나이며 대세의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북한은 “우리 인민은 고령의 나이에 불원천리 평양을 방문한 이 여사에게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애쓰는 진심을 알 수 있었고 여생을 통일의 길에 바치려는 그의 남다른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함.
 - 이어 “괴뢰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보수세력의 위협공갈 속에서도 결연히 방북 길에 오른 여사의 모습에서 6·15의 뜻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의 강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함.
 - 북한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관철해 자주 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말 것”이라고 역설함.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7.27, 訪美 연설)·통일부 대변인의 ‘北 병진노선 지적(‘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외교안보적대안 마련’ 등)’에 대해 “우리(北)의 자주적 노선과 체제에 도전하는 자들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8.2,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 대통령 對北발언(국제적 제재가 불안정을 증대시킬 것, 불안정의 씨앗 등) 관련 ‘공화국에서는 체제불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헐뜯는 것은 중국적 멸망을 눈앞에 둔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실명거론 비난(8.3, 중앙통신·노동신문)
- 이희호 여사(김대중 前 대통령 부인) 일행, 8월 5일 평양 도착 및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 영접(8.5,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근령(대통령 동생) 씨의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발언 논란 관련 “유신의 핏줄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 비난(8.5, 평양방송)
- 이희호 여사(김대중 前 대통령 부인) 일행, 8월 8일 평양 출발 및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 전송(8.8, 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우리를 준비증강 구실로 삼으면 제2한국전쟁 이어질 것”(8/6,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북한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한편,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외무상의 ARF 외교장관회의 연설 내용 중, 추가(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핵 재앙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갖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北, 중국에 또 러브콜…만경대에 中지도자상 등 전시(8/5, 환구신보)
 - 5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장모레이(章默雷) 중국 위인납상관(偉人蠟像館·밀랍인형관) 관장이 중국 위인납상관과 북한의 만수대예술창작사가 공동으로 평양 만경대에 ‘밀랍인물상 전시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장 관장은 양측 기관이 전시관 건축과 전시물 설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전체 부지는 5천㎡ 규모, 조선노동당 혁명투쟁사와 지도인물을 전시하는 ‘혁명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각국 원수들과 정부수뇌 등을 전시하는 ‘우의관’, 건국 이후의 영웅과 모범인물을 전시하는 ‘공훈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함.

바. 대일본

- 북일 외무상 ARF 계기로 양자회담…납치문제 놓고 ‘팽팽’(8/6,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외무상은 6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RF 회의장에서 회담했으며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힘.
 - 리 외무상은 이에 대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한과 일본의 합의를 특별조사위원회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맞섰으며, 양측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핵·미사일 개발 등에 맞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음.

사. 대러시아

- 러 외무 “한반도 비핵화 지지…북한 안보도 보장돼야”(8/5, 연합뉴스)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이 5일 현지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한 양자회담에서 “양국 협력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등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모두의 합의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의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고 북한의 합법적 이익이 모두에 의해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싱가포르, 북한 청천강호 사건 연루업체 재판 개시(8/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이같이 보도하고 싱가포르 검찰이 법정에서 친포해운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대신해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 지불협의를 제기했다고 전함.
 - 앞서 북한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된적이 있음.
 - 싱가포르 내무부 공보실은 VOA에 “자국 업체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작년 1월 알고 즉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을 어기는 개인이나 업체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의 ‘정전협정체결(7.27)’ 62주년 행사(7.27,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 등)를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광대놀음”이라며 “우리(北)의 승리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 호언(8.2,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정계인사 등 ‘北-美대화 전망’에 대해 “우리(北)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北-美간 비핵화를 논하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핵포기 不可 및 北-美 대화실패 미국 책임’ 주장(8.2,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맨해튼 계획’ 관련 시설들을 국립역사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 관련 ‘앞에서

- 평화를 부르짖고 뒤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술책'이라며 '미국이 그 어떤 광대극을 연출해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곳곳이 전진할 것'이라고 주장(8.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라오스 민용항공국 대표단(단장: 로팡카오 야쿠아 국장), 8월 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8.3,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러시아어 세계기금' 원동지부, 8월 4일 '北-러 친선의 해'를 즈음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교재들을 기증(8.4,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B61 유도핵폭탄 Mod 12(LEP)' 비행시험(7.1, 네바다주)에 대해 '〈비핵세계〉 간판 뒤에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세계적인 핵위협과 군비경쟁의 장본인"이라고 비난(8.5,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위키리크스(폭로전문 웹사이트)의 '美 국가안보국의 '05년 訪美 독일 외무장관 등 전화도청' 폭로에 대해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들도 무자비하게 물어메치는 인권유린 왕초"라고 對美 비난(8.5, 중앙통신·민주조선)
 - 일조우호학습 대표단, 8월 5일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8.5,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안전보장관련법안 채택 관련 '일본이 전쟁을 반대한다면 구태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적극 추종하는 방법으로 해외침략을 실현하려는 범죄적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8.6, 중앙통신·노동신문)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말레이시아) 참가 리수용(외무상), 8월 6일 연설을 통해 '공화국은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8.7,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월 7일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당창건 52주년 축전(8.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나이지리아·우간다 대통령의 '김일성 사망 21주년 전문'에 대한 '사의 표명' 답전 발송(8.8, 중앙통신)
 - 美 비확산센터 연구원(멜리사 해넘)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탄저균 제조 가능' 주장에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으로 "미국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인류에게 커다란 고통을 강요한 최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범죄국가"라고 비난(8.8,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합창단 공연 관람(8/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정전협정 체결 62주년(7월27일)을 맞아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돌 경축 공훈국가 합창단공연

을 관람했다”고 보도함.

-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하는 연곡 ‘우리의 7·27’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행군가요 ‘조국보위의 노래’와 ‘결전의 길로’, ‘승리하고 돌아오라’, ‘우리는 승리했네’ 등의 전시가요 등에 이어 ‘우리의 7·27’을 다시 부르며 막을 내렸음.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공연 관람 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반미대결 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라”고 당부했으며, 이날 공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수행함.

■ 김정은 “이희호 여사님 평양 방문 환영한다”(8/8,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이희호 여사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는 방북 인사를 전했다고 김대중평화센터 측이 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맹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순안국제공항에서 이 여사를 영접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김 제1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희호 여사님은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6·15 선언을 하신 고결한 분이기에 정성껏 편히 모시고, 여사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우승 여자축구팀에 “장한 딸들 열렬히 축하”(8/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아컵)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 축구선수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고 “장한 딸들 열렬히 축하한다”며 치하함.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동지께서 당이 안겨준 불굴의 투지와 주체적인 전법으로 마지막까지 이악하게(끈질기게) 싸워 우승함으로써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셨다”고 보도했다.
-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축구선수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며 축하전문을 받은 여자 축구선수들의 분위기를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리수용, 친선·경제협력 논의차 태국 방문(8/8,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과 태국의 친선,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8일 태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5~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가 8일 오후 말레이시아 항공편으로 방콕에 도착했으며, 오는 10일 따나삭 빠띠마프라곤 태국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사이의 투자, 농업기술, 관광 등 경제 협력과 친선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오수용 당비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 승격(8/9,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오수용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7일 열린 평양양로원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오수용 동지가 준공사를 했다”며 오 비서를 정치국 위원으로 호명함.
 -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오 비서의 위원 승격은 올해 2월 '조직(인사)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던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박봉주(내각총리),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혜산-삼지연 넓은철길 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 및 삼지연습지구 여러 개건대상들을 돌아보고 해당한 대책 수립(8.3,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97.8.4) 18주년을 맞아 저작은 '조국통일운동 실천에서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며 '김일성·김정일이 제시한 조국통일사상과 노선은 시대의 변화와 그 어떤 정세 속에서도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라고 주장(8.4,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8월 4일 이집트 '제2수에즈운하' 개통식 참석차 평양 출발(8.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농기계전시장(탈곡기 등 113종 510점 농기계와 부속품 전시) 시찰(8.6, 중앙방송·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기업, 독자경영 통한 수익으로 사업 확장(8/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 금갑체육인종합식료공장 리정호 사장과 방북한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선총련) 상공회일꾼대표단이 지난달 22일 가진 좌담회에서 “판매로 얻은 자금을 이용해 수산사업소나 식당 등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3일 전함.
 - 리 사장은 또 공장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새로운 부지에 생산공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생산관리체계실을 조성하고 수영장 등 종업원 복지를 위한 후생 시설도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 북한, 체육관광 상품 잇따라 출시…“마라톤 관광 오세요”(8/4,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중국 상하이(上海)의 온라인여행사 ‘익스피리언스 노스 코리아’가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에서 마라톤을 하는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고 보도함.

-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마식령스키장에서 마식령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며 “스키장 경사면을 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북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소개함.

다. 경제 상황

- WFP “7월 대북 식량지원 전월대비 110% 증가”(8/4, 미국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
 - 다미안 킨 WFP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4일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62만여 명에게 약 3천230t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음.
 - 이는 2013년 12월 3천755t을 지원한 이후 19개월만에 가장 많은 양이며, 전달인 6월 지원량(1천528t)과 비교하면 110% 증가한 수준이며 제공한 식량은 북한 주민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WFP가 자체 생산한 영양강화 식품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국제적십자연맹, 북한서 홍수대비회의…구호품도 비축(8/4,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연맹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26~27일 평양에서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재난대비회의를 열고 올여름 북한의 홍수 상황을 대비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국제적십자연맹은 또 “북한 주민 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 정화제, 주방기구, 비상대피품 등 구호품을 북한에 미리 비축해줬다”고 덧붙였다으며 회의에는 북한의 기후부서와 인민군 관계자들이 참석함.
- WFP, 홍수 대비 북한에 나무 700만 그루 심어(8/6, 미국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
 -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WFP가 4~6월 북한의 4개 도 산간지역 1천372ha에 나무 700만 그루를 심었으며 이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복구하고 강둑과 관개수로를 재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했다고 보도함.

- WFP는 “이번 사업으로 농경지 1천300ha, 관개수로 15km, 저수지 2개, 우물 240여 곳이 자연재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WFP는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북한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식량지원 사업도 펼쳤음.
- 북한주재 중국대사, 북중관계 해빙에 경제외교 ‘기지개’(8/6, 연합뉴스)
 - 6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진쥘 중국 대사는 지난 4일 북한 유일의 천연 소다수 생산업체인 강서약수공장을 방문해 중국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 수출도 늘려주기를 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대사는 북한 외무성 관료와 중국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강서약수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강서약수공장은 북한 공업과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준다”면서 “공장의 과학관리 수준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격찬함.
 - 그는 이어 “강서약수는 북한 사람들이 다 아는 음료수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환영받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양국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강화에 주요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스위스, 북한 병충해 방제 지원…독일은 유기농법 보급(8/7, 미국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가 16만 달러(1억8천여만원)를 투입해 북한에서 농작물과 나무 병충해 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지난달부터 북한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농업생명과학센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스위스 정부로부터 경사지 농법을 전수받는 북한 주민 2천 가구(8천여 명),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군 양묘장, 군 삼림관리청 관계자 등으로 내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임.
 - 한편 독일의 유기농업연구소는 북한에 유기농 사과 재배법과 친환경 축산농법을 전수하는 한편, 북한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유기농 사과 재배 사업은 남한의 농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품종 개량 사업은 유럽연합으로부터 50만 달러(5억7천여만원)를 지원받아 4년간 진행될 예정임.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일제가 표준시 강탈”…북한, 광복절부터 표준시 변경(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며 “평양시간은 8월15일부터 적용한다”고 보도함.
 - 북한은 “이는 지난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삼천리 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전대미문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함.

- 북한 “일제 강탈한 표준시 되찾은 것은 주권국가 권리”(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홍철화 소장의 글을 통해 “공화국이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간을 평양시간으로 명명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한 것은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조선의 모든 것을 깡그리 파괴약탈한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표준시간을 강탈한 일제의 천인공노한 범죄행위는 천만 군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2006년 이후 미국 입국한 탈북 난민 186명”(8/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15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미국

-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모두 186명이라고 보도함.
- 2015 회계연도의 월별 입국 탈북 난민 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5명과 2명이고, 올해 1월 1명, 5월 2명, 6월 1명, 7월 4명이며 연도별로는 2008 회계연도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음.
 - 탈북자들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처음으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평양주재 외국공관에 “외설물 반입하지 말라”(8/7, 미국의소리)
 -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외설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폴란드 외무부 공보실을 인용해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은 반입금지 품목에는 ‘국가와 체제의 존엄을 훼손하는 매체’뿐 아니라 외설물도 포함돼 있다”고 전함.
 - 독일 외무부도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말 평양의 독일대사관에 이런 지침을 구두로 통보해 왔다”며 이후 입국 과정에서 통제가 매우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마. 사회 동향

- 북한, 동아시아인컵 축구대회 잇단 일본 격파에 환호(8/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남자 대표팀이 전날 중국 우한(武漢)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 축구선수권대회 중 일본과의 경기에서 2대 1로 이겼다고 보도함.
 - 방송은 “우리 팀 선수들이 전반전에서 실점 당했지만 불굴의 정신력과 강毅한 투지,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해 상대팀 그물을 흔들어 놓았다”며 선수들의 투혼을 칭찬함.
- 북한 주도 세계태권도대회 한국 시범단 참가 무산(8/6,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 한국 시범단 참가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린 한국 주도 세계 선수권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면서 양측의 교차 참가가 기대됐으나 ITF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한국 시범단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태권도연맹 총재들 간에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북한, 세계수영선수권 금메달 김국향에 ‘인민체육인’ 칭호 수여(8/6, 조선중앙통신)
 - 북한당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금메달을 안긴 김국향(16) 선수에게 ‘인민체육인’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김국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쿠아틱스 팰리스에서 열린 201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북한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음.
- 북한 세계수영선수권 금메달 김국향 '금의환향'...평양시내 행진(8/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주체 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친 김국향 선수와 김은향, 송남향 선수들이 오늘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겼다”며 이들의 귀국 소식을 전함.
 - 방송은 “개선문에서부터 김일성경기장으로 향하는 연도(도로 양 옆)에서 체육인들과 수도의 근로자들이 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며 분위기를 전함.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중·북 관계

- 북한주재 중국대사, 北·中 관계 해빙에 경제외교 '기지개'(8/06, 연합뉴스)
 - 리진권 중국 대사는 지난 4일 북한 유일의 천연 소다수 생산업체인 강서약수공장을 방문해 중국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 수출도 늘려주기를 희망하는 등 경제외교에 나섬.
 - 리 대사는 북한 외무성 관료와 중국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강서약수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강서약수공장은 북한 공업과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준다"며 격찬하면서, "중국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양국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강화에 주요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시진핑 주석의 남한 선방문 등으로 북·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펼치는 리 대사의 이런 경제외교활동은 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로 관측됨.
- 中 연변 훈춘, 북·러시아 연결 무역·관광거점 급부상(8/07, 연합뉴스)
 -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시가 북한과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무역·물류·관광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들 3국을 둘러보는 '1일 관광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훈춘시는 북한과 러시아와 접경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내륙·해운 운송로 및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를 계기로 지린성 일대와 러시아 연해주, 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무역교류망이 본격 가동됐다고 전함.

라. 일·북 관계

- 北·日, 외무상 ARF 계기로 양자회담…납치문제 놓고 ‘팽팽’(8/06,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 중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리 외무상은 이에 대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한과 일본의 합의를 특별조사위원회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맞섬.
 -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가족이나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북·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짐.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아세안안보포럼 의장성명 초안, “북한, 기본인권 보호해야”(8/04,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오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초안에 북한에 기본적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보도함.
 - 이 초안은 “(참가국들은) 북한에 기본적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고, 또 참가국 장관들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계 대니얼 유 준장, 美해병 제1사단장 취임(8/03, 연합뉴스)
 - 제1사단 부사단장이던 대니얼 유(55) 준장은 지난달 30일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제1사단장에 취임하였고, 이로써 그는 美해병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병력이 많은 해병 제1사단의 지휘관으로 2만3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됨.

- 그는 2013년 1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제1 해병 원정군 사령관을 맡아 현지에서 병력을 지휘하면서 그 해 4월에 열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선거 당시 치안을 관리했으며, 2014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현장 마무리를 책임짐.
- 미군에서 근무 중인 한국계 장성은 누구 있나(8/03, 연합뉴스)
 - 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계 장성은 유 사단장을 포함해 스티븐 커다 미 육군 제9 임무지원사령부(MSG) 사령관 내정자, 리처드 김 아프간 주둔 합동사령부 임무 지원 사령관, 존 조 육군 의무감실 근무자 등 네 명이며, 계급도 같은 준장임.
- 美해군, F-35B용 초대형 상륙강습함 건조 …2017년 진수(8/03, 연합뉴스)
 - 美해군은 F-35B 차세대 합동타격전투기(JSF)를 운용하는 아메리카 급 상륙강습함 트리폴리 호(LHA-7)를 미시시피주 파스카쿨라의 헨팅턴 잉글스 조선소에서 2017년 1월 진수 예정으로 건조 중임.
 - 아메리카호(LHA-6)에 이어 두 번째 아메리카 급 상륙강습함인 트리폴리 호는 만재배수량 4만 5천693t, 길이 257.3m, 폭 32.3m에 승무원 1천204명과 해병대원 1천871명을 탑승시킬 수 있음.
 - 트리폴리 호는 소형 항공모함과 비슷한 규모로 F-35B 외에도 MV-22B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MH-60s 나이트호크, CH-53K 슈퍼 스텔리언, UH-1 비놈, AH-1Z 바이퍼 등의 항공기도 실을 수 있음.
- 美 시카고 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8/07, 연합뉴스)
 - 美 시카고 시의회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및 인권 유린 사실을 규탄하고, 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려는 한인들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이 결의안은 시카고 한인 상권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마거릿 로리노 시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해 지난달 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램 이매뉴얼 시장이 서명함.
 - 美 연방 상하원과 일리노이 주의회 등이 앞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대도시 시의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결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교도통신, “美, ‘박대통령 中열병식 불참’ 한국에 요청”(8/09, 연합뉴스)
 - 美 정부는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함.
 - 미국 측은 박 대통령의 행사참석은 그 자체가 ‘중국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켰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으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박 대통령의 참석 유보를 요구한 것임.
 -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외교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실제 그런 일도 없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韓·中, “한반도 정세변화 가능성 주목, 상황악화 방지 조율키로”(8/05,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에서의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중,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측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한반도 긴장 악화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정부 당국자는 한·중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수개월 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조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양 장관이 공동 인식한 ‘한반도 정세’나 ‘상황 악화’ 등에 대한 우려는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우려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 ‘주변국 친척집 드나들듯’ 시진핑 주석 외교, 운명공동체 구축(8/07, 연합뉴스)
 - 링성리(凌勝利)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외교(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지낸다)의 방침이 주변국과의 운명 공동체 구축에 찍혀 있다고 분석함.
 - 링 연구원은 “시 주석은 집권 후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주변국을 ‘친척집’ 방문하듯이 자주 찾았다”면서 여기에는 운명 공동체의 뿌리를 주변국에 심고 응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
 - 링 연구원은 시 주석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주변 환경이

(1) 영토분쟁, 전염병, 국경을 초월한 범죄 등 각종 안보 위협의 가중, (2)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2원화 구조'의 가속화, (3) 태국, 미얀마 등 국내 정세가 불안한 국가 출현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중국인 57%, 韓·中 미래 긍정평가…中·일은 18% 불과(8/07, 연합뉴스)
 - 환구시보가 7월22일~8월1일 베이징을 포함해 전국 16개 주요도시의 2천20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 10명 중 6명 정도는 한·중 관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중 관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56.8%로 집계된 반면, 역사문제,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는 중·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8.4%로 주변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5개 주변국 중 중국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할 국가로 러시아(68.4%)를 꼽음.

다. 한·일 관계

- 日고교생도 안보법안 반대 시위…“미래 맘대로 결정말라”(8/03, 연합뉴스)
 - 日고등학생들이 2일 도쿄 시부야(澁谷)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 집회는 법안에 반대하는 수도권 고교생 그룹 '틴스 소울(T-ins SOWL)'이 주최하였으며, 대학생과 성인을 포함해 약 5천 명이 참가함.
 - 고교생들은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아베 신조로부터 미래를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일부 학생들은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데 나이는 상관없다”, “당연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외침.
 - 일본에서는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3학년생 또는 대학 1학년생에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됨.
- 차대통령, “아베담화, 역대 역사인식 확실히 재확인해야”(8/0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담화”가 역대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 데 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된 데에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등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 역대내각의 역사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아베 담화에는 전후 50주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핵심 표현인 ‘사죄’, ‘반성’, ‘침략’, ‘식민지배’ 중 ‘사죄’와 ‘식민 지배’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전망되는데, 이 경우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임.
- 아베 총리 측근 학자, “사과 부족하다는 건 일본 미디어와 한국뿐”(8/03,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측근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일본 국제대학 학장은 BS 후지TV에 출연하여 역사 문제에 관해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다. 반성이나 사죄를 더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사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 미디어와 한국뿐”이라고 말함.
 - ‘21세기 구상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좌장 대리이기도 한 기타오카 학장은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해 “일정한 배려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말함.
 - 기타오카 학장의 이번 발언은 담화에 한국과 중국 등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는 것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보임.
 - 일본서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수정주의 시각, 주류로 부상(8/04, 연합뉴스)
 - BBC는 패전 70주년을 앞둔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적 시각이 주류로 점차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패전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과 중국에 계속 사과해야하는 상황에 반감을 느끼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함.
 - 극우인사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는 ‘일본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격)으로 재직 중인 2008년 외부 공모에 제출한 논문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 제책을 벗었음.
 - 그러나 지난해 2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20~30대 연령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득표율 4위에 올라 주목받았던 그는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의 시각에서 본 역사를 강요당했다”면서 ‘진짜 일본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방위상, “안보법안 통과시 핵무기운반도 법리로는 가능” 파문(8/05,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킴.
 - 나카타니 방위상은 외국군을 위한 탄약 수송에 있어서 “핵무기 운반도 법조문 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로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함.
 -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안을 놓고 ‘고무줄 해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리상으로는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진다는 방위상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 **아베 총리, 히로시마 위령식서 ‘비핵 3원칙’ 19년만에 생략(8/06,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인 6일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위령식 인사말에서 역대 총리가 지난 19년간 매년 언급해온 비핵 3원칙을 거론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킴.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이라는 생각은 전혀 흔들림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단체 협의회 사쿠마 구니히코 이사장은 “비핵 3원칙은 국시(國是)”라며 “의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함.
 - 아베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가 된 뒤 작년과 재작년 히로시마 위령식에서 비핵 3원칙 견지 방침을 언급함.

-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식민지배 사죄 필요성 거론 안 해(8/06, 연합뉴스)**
 - 아베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식민지 지배는 사실로서 기재되었을 뿐 무라야마 담화에서처럼 사죄할 필요성은 거론되지 않음.
 - 보고서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 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며 전쟁을 이 같이 ‘침략’으로 규정함.

- 그러나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복수의 간담회 구성원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주석을 달았으며,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실제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되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사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이 골대 이동”, “박대통령 ‘심정’ 앞세워”...아베 자문보고서(8/06,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가 공개한 보고서는 한국이 “골대를 움직여왔다”며 양국관계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한 것이 특징임.
 -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에서 ‘골대’를 움직여온 경위에 비춰 영속하는 화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적음.
 - 보고서가 거론한 ‘골대 이동’은 한국이 일본에 군위안부 문제해결을 계속 요구한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보고서는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창설 등 일본의 노력은 거론했지만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식민지 시기 문제의 본질과 해결 노력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음.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心情)’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이 엄격한 對日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에 “일본은 이성적으로는 국제 정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 반면, 심정적으로는 부정·극복해야 할 상대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겼다”고 주장함.
- “日, 아시아발전에 크게 기여”, 아베 담화 보고서 ‘자화자찬’(8/06, 연합뉴스)
 - 보고서는 일본이 “평화, 법의 지배,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자유무역체제, 민족자결,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 지원을 전제로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국제시스템에 충실하게 살아온 국가의 하나”라고 규정함.
 - 보고서는 일본이 대규모 ODA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개혁과 시장경제를 지원했다고 소개하고, 또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안전보장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함.
 - 또한, 이런 평가를 토대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아시아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본도 이 지역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일익으로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종래보다 한층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자국의 역할을 규정함.

- **日최대보수지 요미우리, “아베담화에 ‘사죄’ 포함해야” 첫 주장(8/07, 연합뉴스)**
 - 발행 부수 최다인 일본 보수지 요미우리 신문이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아베 총리의 대응이 주목됨.
 - 요미우리 사설은 “아베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 인용형태로) 역대 내각의 견해에 입각해 간접적인 표현으로라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는 말을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함.
 - 아베 총리가 여태 과거사와 관련한 ‘사죄’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베 담화에서도 사죄가 빠질 공산이 커 보이지만 한국과 중국 정부의 반발과 더불어 요미우리의 사죄 표현 거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됨.

- **아베 담화 보고서, 식민지화 경위 대만만 언급…한국은 안 다뤄(8/07,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관련 자문기구 보고서가 식민지배 사실을 명기하더라도 대만 식민지화의 경위만 언급하고 한국 식민지화는 언급하지 않음.
 - 보고서에는 “아시아에서는 식민지화를 면하고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대만을 식민지(1895년)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한국을 식민지화한 과정은 생략되었고, 러일전쟁 직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한국을 병합한 데 대한 언급 또한 없음.
 - 이는 조선 식민지화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때부터 줄곧 조선 식민지화는 ‘조약(을사늑약)’에 의한 것으로서 당시에 합법이었다고 주장해옴.

- **아베 담화 전문가 보고서, 중국엔 기대감·한국엔 불신감(8/07, 연합뉴스)**
 - 보고서는 “중국에는 기대감, 한국에는 불신감”을 표출하는 등 한국과 중국에 대해 현격히 다른 시선을 투영했다는 평가가 제기됨.
 - 중국에 대해 “서로 화해를 향한 자세를 보여줬지만 쌍방의 생각이 충분히 합치하지 않은 70년이였다”며 중국의 노력을 일정 정도 평가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에서 ‘골대(골포스트)’를 움직여왔다”고 주장함.
 - 보고서의 한·중 관련 내용이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 것은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중·일 관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문제로 크게 부딪힌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중·일 관계를 개선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는 아베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인식이 투영되었을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 14일 각의결정…내용은 내게 맡겨라”(8/07,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오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의 참가자들은 담화 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일임하기로 함.
 - 아베 총리는 “지난 전쟁에 입각해 전후의 발걸음과 역사를 조용히 반추하며 지혜를 결집해 미래를 지향하는 담화로 만들고 싶다”고 밝힘.
 -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할 경우 아베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전후 60년 담화(고이즈미 담화)와 격이 같게 됨.

- 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없다…비슷한 문구도 없어(8/09, 연합뉴스)
 - 아베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는 없었으며,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했으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행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함.
 - 이에 대해 공명당 측은 “과거 담화를 되밟는다고 총리는 말하지만 사죄의 의미가 세계 각국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죄의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또 “일본이 왜 반성을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
 -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만큼 공명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데, 만장일치체인 각의 결정의 원칙상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시진핑 주석의 강군 초점은 ‘실전승리’…정보전·해상충돌 겨냥(8/03, 연합뉴스)
 - 중국일보가 시 주석이 취임 이래 추진해온 군개혁을 다룬 기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 개혁은 ‘실전 승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음.

- 시 주석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회의에서 당의 지휘를 따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강 있는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장군의 목표라고 분명히 하고, “실전에 맞춰 교육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초점을 맞춰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시 주석의 이 같은 주문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의 분쟁도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일의 ‘국지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메시지란 분석이 나옴.
- 中공군연구소, “서태평양 정찰·공격력 강화해야”(8/04, 연합뉴스)
 - 중국 공군은 일본과 미국, 베트남을 ‘위협’ 요인으로 지목, 서태평양 일대에 대한 정찰, 공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국군 싱크탱크 보고서가 공개됨.
 - 중국 공군지휘학원은 작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개입에 대응하고 신형 전략폭격기와 ‘사드(THAAD)’ 등 9개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이 2030년까지 영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감시 범위를 제1열도선에서 제2열도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함.
 - 이와 관련, 퇴역 중국군 대교(大校·한국군 준장격) 출신 해군 전문가 리제(李杰)는 앞으로 해군과 공군 간 합동 훈련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도미한 링지화 동생, 시진핑 주석 방미 앞두고 美·中 갈등요인 부상(8/04, 연합뉴스)
 - 중국이 부패 혐의로 공직에서 퇴출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 전선공작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을 자국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첫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더욱 불편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NYT)는 전함.
 - 링완청이 정치적, 경제적 핵심인사들과 교류해오고 시진핑 주석을 보좌하는 고위관료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의 도미가 중국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미국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추측됨.
 - 사법협력을 위한 미중 관리들의 포럼인 ‘미·중 합동연락소’에서는 링완청을 중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중국 관리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국의 태도는 링완청의 미국 체류 여부를 아예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냉담함.

- 中, 70년 전 '남해9단선' 영해기선으로 고집할까(8/04, 연합뉴스)
 -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9단선은 1940년대 중국정부가 확정하고 역대 중국정부가 계승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약 70년 전 남중국해에 설정한 ‘남해 9단선’을 영해기선으로 고집할 가능성이 시사됨.
 - 왕 외교부장은 “(중국정부가 9단선을 확정하고 나서) 40년 뒤 만들어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1982)’으로 9단선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고 밝히고, 또 9단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꿈꿉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비난함.
 - 일각에서는 이 같은 왕 부장 발언이 9단선이 일종의 영해기선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 당사국들 사이에서 9단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中, 시추장비 보호제 독자 개발…남중국해 석유탐사 ‘탄력’(8/04, 연합뉴스)
 - 중국 연구진이 획기적인 시추장비 보호제를 자체 개발하게 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의 석유 탐사는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학원 칭다오 생물에너지·과정연구소의 류즈홍 교수 연구팀은 저온의 물 속에서 퇴적암이 석유 시추장비의 날과 부딪힐 때 생성되는 진흙에 장비가 손상 되는 것을 80% 가량 줄일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개발함.
 - 중국은 이번 보호제 개발로 특정국가 남중국해 분쟁을 이유로 관련제품 공급을 축소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美·中 원자력협정 개정안 통과…미국 원전 중국 수출 길 ‘활짝’(8/04,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산 원자료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한 내용의 미·중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 수십 개의 원자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됨.
 - 美행정부는 양국의 원자력 협력이 중단되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양국 관계가 나빠지며, 핵 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해옴.
 -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핵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거나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플루토늄 추출이나 재가공 위험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

- 美·中, 테러대응엔 한목소리…“정보교환 등 협력강화”(8/05, 연합뉴스)
 - 티나 카이다노우 미 국무부 반테러 조정관과 청궈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외교 차관급 反테러 회담’에서 정보교환, 사법 협력 등 양국의 테러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중국이 미국과의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점점 증가하는 해외 자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일본·아세안, ‘남중국해 공사 멈춰라’ 중국 협공(8/05,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 일본, 아세안이 삼각공조를 구축,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 분쟁도서 영유권 강화를 노린 중국의 개발사업 중단을 압박하고 나섬.
 - 케리 장관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시설물 군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남중국해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한편, 기우치 미노루(城內實)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한 일방적인 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은 이를 일축하고 아세안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행동수칙(COC)’의 제정과 분쟁 당사국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개입 차단을 시도함.

- 中외교부장, “남중국해 매립 중단했다”…美, “못 믿겠다”(8/06, 연합뉴스)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는 남중국해 매립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미국 관계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그러나 왕 부장은 ‘인공섬 건설을 영원히 중단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면 중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말해 즉답을 피함.
 - 왕 부장은 또한 중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인공섬을 만드는 매립 작업을 이미 끝내 등대, 의료·긴급구호 설비, 기상 장비 등 시설물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임.

- 中, 美에 “위구르 독립세력 테러에 공동 대응하자”(8/06, 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간 외교 차관급 反테러 회담에서 ‘동투르

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 등 위구르족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주의 세력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미국에 촉구함.

- 중국 정부는 특히 ETIM 조직원들이 신장에서 시리아와 이라크로 건너가 테러조직에서 훈련을 받은 뒤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종교·문화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 미국 당국자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ETIM이 실제로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일관된 조직을 갖췄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美·日·中, ARF서 '남중국해 인공섬' 놓고 연일 격돌(8/07, 연합뉴스)

- 미국, 일본은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에게 도발적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아시아 안보관'과 '역사 문제' 등을 동시에 언급하며 역공을 펼치면서 미국, 일본과 다시 한 번 격돌함.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역시 중국과의 양자 고위급 접촉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며 미국과 함께 협공하는 모양새를 연출함.
- 중국은 이에 세계2차대전 승리 7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각국은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중요한 경험을 흡수하고 신형 국제관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과거사 교훈'과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해 해결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반격함.

■ 美, 중국 열병식 '패권 과시용' 경계...대표단 안 보낼 듯(8/09, 연합뉴스)

- 중국이 2차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음.
- 오바마 행정부의 '침묵'은 미국이 이번 행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암시하며, 무엇보다도 이 행사가 단순한 기념 퍼레이드 차원을 넘어 군사적 패권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임.
- 다만, 미국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는 피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미국이 본국 차원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현지 주중 대사를 보내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

바. 미·일 관계

- 일본인 49%, “美원폭투하 용서 못해”...40%, “부득이했다”(8/03, 연합뉴스)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0주년을 맞아 NHK가 6월 하순 20세 이상 남녀 1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일본인이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원폭투하가 ‘어쩔 수 없었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되었으며, 히로시마에서는 44%로, ‘용서할 수 없다’는 답보다 1%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나가사키에서는 41%로 집계됨.
 -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세계 어디에선가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꽤 있다’는 응답과 ‘조금 있다’는 응답이 합쳐서 66%에 달함.

- 日관방장관, “美 일본정부 도청,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8/04,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美 국가안보국(NSA)이 일본 정부 인사를 도청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맹국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측에 “사실 관계의 확인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기밀성을 요하는 자료에 관해서는 만전의 대책을 기하고 있으며 누설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 美·日 낙도탈환 연합훈련...“센카쿠 분쟁 염두”(8/07,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참)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美해병대 캠프에서 수륙양용작전을 중심으로 미군과 연합 훈련 ‘돈 브리즈’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함.
 - 방위성은 이번 훈련을 위해 통합막료감부,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중앙즉응부대, 해상자위대 소해대군, 항공자위대 항공총대 소속 자위대원 약 1천100명을 파견하며, 미군은 제3함대, 제1해병기동전개부대 등이 참가함.
 -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낙도탈환 훈련이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함.

- 미국무차관, “핵무기 감축과 억지력 향상 양립 가능”(8/08, 연합뉴스)
 - 로즈 고테필러 미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억지력에 관해서 핵무기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미사일 방어 고도화 등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하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향상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핵무기의 감축과 억지력 향상은 양립 가능하다”고 말함.
 - 고테필러 차관은 내년 4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자리이며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 법안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법안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이 작동하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논평함.

사. 미·러 관계

- 푸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 생일 축하 전문(8/04, 연합뉴스)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푸틴 대통령이 생일을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전함.
 -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생일 축하 전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담은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짐.
- 美, 러시아 석유·가스전 제재대상에 추가…긴장 고조(8/08, 연합뉴스)
 - 美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사할린 인근 오호츠크해의 유즈노-키린스크에 석유·가스전을 수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러시아 유전을 경제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임.
 - 이번 제재에 따라 상무부 허가가 없는 한 미국 정부 수출관리규정(EAR)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등의 물품을 이 유전에 수출·재수출·이송하는 것이 금지됨.
 - 산업안보국은 이 유전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상 이해관계에 상반되는 활동에 연관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러시아는 “불행히도 이번 결정은 양국 간 관계를 심하게 손상할 것”이라고 지적함.

- 푸틴 대통령, 이란 군사령관 접촉설…미국 사실 확인 나서(8/08, 연합뉴스)
 -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콰셈 솔레이마니 이란 특전사령관을 비밀리에 만나 이란의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 도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사태 파악에 나섬.
 -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이란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해 “솔레이마니는 유엔 제재에 따라 외국여행이 금지된 상태”라며 지금까지 유엔의 출국허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푸틴 대통령과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접촉설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말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단언컨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없다”면서 러시아는 비밀 접촉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음.

아. 중·일 관계

- 中징용피해자측, “불만스럽지만 미쓰비시 사과 수용”(8/03, 연합뉴스)
 -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사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들이 베이징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화해협의를 받아들일 것이다”는 입장을 밝힘.
 - 이들은 성명에서 “대다수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화해(협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이고, “만약 화해가 실현된다면 중일 우호와 세계평화에 중대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미쓰비시는 화해 협의의 최종 타결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함.
- 시진핑 주석의 눈에 비친 항일전쟁, “옛 중국을 탈바꿈시켜”(8/04,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신문망은 최근 2년간 시 주석이 각종 기념식과 ‘정치국 집체학습’ 회의 등에서 한 관련 발언들을 정리해 소개하는 글에서 시진핑 주석이 항일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대거 공개됨.
 - 시 주석은 최근 열린 제25차 정치국 집체학습 회의에서 항일전쟁 승리에 대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과거의 중국을 ‘봉황열반 육화중생(鳳凰涅槃, 浴火重生: 봉황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불속에 뛰어들어 새 삶을 얻다)’하게 하는 새로운 여정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함.

- 이런 발언은 시 주석이 항일전쟁을 단순한 전쟁 승리에서 나아가 중국이 치욕의 역사를 씻고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됐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中 열병식에 체코대통령 참석…서방은 ‘눈치 보기’(8/05, 연합뉴스)
 -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체코의 밀로스 제만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임.
 - 현재 각국은 열병식 참석 통보를 늦추며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며, 특히 서방 정상들은 불참시 중국과의 투자협력 관계가 틀어질까 우려하면서 참석할 경우엔 미국과 일본의 눈 밖에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만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대해 서방국들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제만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며 서방과 마찰이 적지 않았던 뿐더러 총리 중심의 체코 정치체제하에서 대통령은 명예직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임.
- 아베 총리, ‘패전국 사죄 모양새’ 우려 9월 방중 포기한 듯(8/05, 연합뉴스)
 - 중국 언론은 ‘미국의 소리(VOA)’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피해 9월 중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중국신문망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새로운 안보관련 법안이 의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아베 총리가 9월 방중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또한, 통신은 아베 총리가 열병식을 피해 방중하더라도 결국은 패전국 정상이 중국에 가서 사죄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방문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中외교부장, 日에 “역사문제, 꺾로 넘어가선 안된다” 경고(8/07, 연합뉴스)
 - 왕이 외교부장은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에 “피를 써서 (역사문제를)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경고함.
 - 그는 “역사문제에서 일본은 마땅히 성실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일본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서도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견지하며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표명함.

-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아베 담화’ 전문가 자문기구가 전날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관련 보고서에서 2차 대전 중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단순한 ‘사실’로 기술하고 ‘사죄’ 표현을 담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申언론, 일본 맹비난 “원폭 맞은 것으로 침략역사 못 덮는다”(8/07, 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들은 침략사죄를 거론하지 않은 아베 총리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 추도사,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전문가 자문기구의 보고서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음.
 - 인민일보는 “피폭이라는 비극이 침략 역사를 덮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도 거론하지 않고 침략행위에 대한 언급도 회피했다”며 비난함.
 -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아베 총리의 원폭 투하 70년 추도사나 아베 담화 전문가 자문기구의 보고서에 대해 공식논평을 내놓지 않음.
- 中, “아베담화, 전쟁 반성·책임 명확히 해야”(8/08,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오는 14일 발표될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와 관련하여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
 -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측이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전쟁의 성격과 전쟁의 책임 문제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베 담화 관련 총리 자문기구가 6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같은 중국 측의 발언은 아베 담화에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풀이됨.
- 英·日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법의지배’ 강조…중국 견제(8/08,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이 일본에서 전략 대화를 열고 법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일본이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를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두 장관이 언급한 ‘법에 의한 지배’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견제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짐.
 - 또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보법제 개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 패전70주년에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로 낼 듯(8/0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료를 개인 돈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아베 총리는 9월 초 '제2차 세계대전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전후로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참배 보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됨.

자. 중·러 관계

- 신밀월 중·러, 20~28일 연해주 앞바다서 대규모 상륙훈련(8/04, 연합뉴스)
 - 정치·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20~28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포트르 대제만(灣)을 포함한 러시아 연안에서 상륙작전이 포함된 대규모 '해상연합-2015(II)' 연합군사훈련을 함.
 - 9월 3일은 중국이 지정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이 되는 날인만큼, 양국의 이번 훈련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대폭 격상한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신밀월'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됨.

차. 일·러 관계

- 러시아, 일본에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 개발 참여 촉구(8/07, 연합뉴스)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정치·외교 논쟁을 자제하고,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함.
 -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정치를 경제에 앞세우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러시아와 일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열도의)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세계농인연맹 정기 총회 첫 참관(8/3, 자유아시아방송)
 - 터키 즉 토이기에서 지난달 말 개최된 세계농인연맹 정기총회에 이어 28일부터 1일까지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남북한 농인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음.
 - 한국 대표단은 북한 측에 수화사전 등을 전달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자아내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정치적 차이를 넘어 수화로 만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오스트리아 출신 세계농인연맹 콜린 앨런(Colin Allen) 회장은 1일 폐막식에서 북한팀이 사상 처음 정기총회에 참관하도록 많은 역할을 한 로버트 그룬트(Robert Grund) 세계농인연맹 북한담당관(Representative Officer of the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to Pyongyang)의 노고를 치하했음.
 - 그룬트 북한담당관은 세계 97개국에서 온 1천200여 명의 농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공로를 인정받게 돼 매우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의 다양성 강화(Strengthening Human Diversity)’를 주제로 수화 강연회가 110여 차례 열렸는데, 북한의 이성일 연사가 북한의 농인 관련 발표를 하고 그룬트 북한담당관이 국제수화로 통역하기도 했음.

- 북 주민, 병해충 피해에 시름(8/5, 자유아시아방송)
 - 오랜 가뭄 끝에 찾아 온 장마가 북한의 농민들에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비도 적당히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농사작황과 관련해 현지 소식통들은 “그럭저럭 쓸쓸한(평범하고 보통인) 수준”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병해충 피해가 늘고 있어 북한 당국도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음.
 - 일부 농작물들은 빨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 3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가뭄도 이겨내고 장마철도 무난히 넘겼는데 병해충 피해가 심상치 않다”며 “양강도의 주요 작물인 감자와 강냉이 모두에서 병해충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음.

- 7월 말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병해충 예찰보고에 따르면 감자의 경우 무당벌레가 정상치의 5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그는 이야기했음.
 - 감자무당벌레는 평당 1~2마리가 정상치인데 지금은 평당 10마리 이상 발견된다는 게 그의 설명임.
 - 특히 습하고 무더워 강냉이 깎부기병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냉이 깎부기병은 전염성이 강한데다 특별한 방제대책도 없어 협동농장들마다 손을 놓고 구경만 하는 실정이라고 그는 덧붙였음.
 - 이와 관련 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그런지 전반적인 농작물들이 모두 병해충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협동농장들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으나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음.
 - 협동농장들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잎을 따낸 담뱃대를 우린 물과 소변을 희석시킨 물, 나무를 태운 재와 버들잎을 우린 물을 농작물에 뿌리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음.
 - 그런가하면 ‘특별보호림’인 온성군 ‘왕재산기념비’ 주변 산림과 라선시 소나무 숲이 누렇게 변하고 있어 중앙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음.
 - 소나무는 송충으로 피해를 보는데 외국에서 약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음.
- 북한, 평양주재 외국공관에 “외설물 반입하지 말라”(8/5,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외설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음.
 - 방송은 폴란드 외무부 공보실을 인용해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은 반입금지 품목에는 ‘국가와 체제의 존엄을 훼손하는 매체’뿐 아니라 외설물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 독일 외무부도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말 평양의 독일대사관에 이런 지침을 구두로 통보해 왔다”며 이후 입국 과정에서 통제가 매우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 스웨덴 외무부와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북한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 입국 과정에서 몸수색은 하지 않지만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내용물 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신체 불가침과 각종 관할권 면제 특권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인권 규범에 위배된다며 북한 외무성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음.

2. 북한인권

- 미 상원, 외국 인권유린자 제재 법안 통과(8/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연방상원이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S.284)’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음.
 -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이들의 금융 및 여행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유린 관계 당국 및 책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북한 정권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벤자민 카딘(메릴랜드, 민주) 의원이 올해 1월 28일 존 매케인 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사법관할 외의 처형, 고문,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기준을 위반했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 및 공정재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및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차원에서의 다각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 취소를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해외 계좌 동결 등이 이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임.
 - 이미 미국 하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H.R.624)이 상정돼 있어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이 조만간 양원을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됨.
 - 법안 제목에 언급된 단어 ‘매그니츠키’는 러시아 정부 고위급 관리들의 각종 비리를 폭로한 뒤 2009년 러시아 정부에 체포돼 같은 해 37세의 젊은 나이로 의문사한 세법 전문 변호사 ‘세르게이 매그니츠키’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서 붙여졌음.
- 아세안안보포럼 의장성명 초안 “북한, 기본인권 보호해야”(8/4, 연합뉴스)
 - 오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의장성명 초안에 북한에 기본적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4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교도는 이날 입수한 의장 성명의 최근 초안을 토대로 참가국들이 올해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인권보호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교도는 이 초안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인 ‘DPRK’로 지칭하면서 “(참가국들은) 북한에 기본적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음.
 - 성명 초안에는 또 참가국 장관들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지난해 ARF 의장국 미얀마가 채택한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호적 여건 조성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그러나 올해 성명 초안에 비슷한 문구가 들어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음.
 - 의장성명 초안에는 중국이 인공섬 건설 등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문제를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초안은 중국의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의 몇몇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건설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음.
 - 그러면서 “참가국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삼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교도는 이런 표현이 앞서 나온 초안보다 강해진 것이며 ‘간척’과 같은 단어 선택도 더 구체적이라고 평가했음.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문제 협의체인 ARF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총 27개국이 참가한다.
 -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내 안보협의체인데다 북한 외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국이 모두 포함돼 있음.
- 독일 첫 북한인권 영화제에 출간 봄까지(8/4,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오는 11월 독일 베를린과 튜빙겐에서 북한인권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슈프리켈스 대표는 자신이 튜빙겐대학에서 두 번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지의 한 단체가 ‘사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동참할 뜻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 따라서 올 가을 베를린에서 열릴 북한인권 영화주간 중 3일은 튜빙겐대학에서도 북한인권 영화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임.

- 영화제에서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한국의 협력 인권단체가 제공하는 영화 이외에 ‘크로싱’이나 북한예술에 대한 독일인의 단편영화 등 7~8편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슈프리켈스 대표는 더 많은 독일과 한국의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영화제를 개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슈프리켈스 대표는 최근 독일에서 북한인권 영화주간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 북한인권에 대한 독일인의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서적도 여러 권 출간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특히 탈북자 이현서 씨의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The Girl with Seven Names)’ 영문판의 독일어 번역본인 ‘검은 목련’은 북한 인권 문제를 처음 접하는 독일인도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이 외에도 루시아 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여성의 수기 ‘하늘과 달 사이의 별(Stars between the Sun and Moon)’ 등이 독일어로 발간됨.
- 미 북한인권단체 의회 설명회 “북한 내부 중대한 변화 일어”(8/6, 미국의소리)
-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링크(Link)’가 5일 미 의회 방문관에서 북한 내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음.
 - 미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이날 설명회에서 링크의 박석길 정책연구국장은 탈북자들과 다른 수많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여섯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박 국장은 먼저 자본주의를 꼽았는데, 냉전 종식과 경제 붕괴, 대규모 기아를 겪으면서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당국은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됐다는 것임.
 - 이어 정보 유입의 확대가 꼽혔는데,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가 약화되고 정보통신 기술과 입소문 등 여러 비공식 경로들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대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임.
 - 박 국장은 계속해서 북한에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적 연결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중대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 경제적 변화와 외부 세계 정보 유입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아직 조직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당국의 규제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임.

- 박 국장은 특히 장마당 세대 출현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 사회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를 경험한 장마당 세대는 정부에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어릴 때부터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접한 장마당 세대는 인식과 가치관, 행동 등에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밖에도 북한 내 만연한 부패,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의 가족들과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음.
- 박 국장은 이런 여섯 가지 중대한 변화가 북한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음.
- 그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것들이며, 멈추게 하거나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박 국장은 덧붙였다.
- 박 국장은 북한의 이런 변화가 결국 아래로부터의 체제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 10-20년 내에 지금과는 아주 다른 북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탈북자

- “2006년 이후 미국 입국한 탈북 난민 186명”(8/5, 연합뉴스)
 -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된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모두 1백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미국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15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미국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모두 186명이라고 보도했음.
 - 2015 회계연도의 월별 입국 탈북 난민 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5명과 2명이고, 올해 1월 1명, 5월 2명, 6월 1명, 7월 4명이었음.
 - 연도별로는 2008 회계연도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음.
 - 탈북자들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처음으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음.

-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현지 정착을 위해 8개월 동안 매월 200~300달러(22만~33만원)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구매권 등을 지원받음.
-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한편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모두 5천607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미얀마 1천78명, 콩고민주공화국 879명, 소말리아 818명, 부탄 749명 등의 순임.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IFRC, 북 홍수 예방 사업 활발(8/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6일과 27일 평양에서 조선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재난 대비 회의’를 열고, 긴급 및 재난 대비 국가 위원회의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올 여름 북한의 홍수 상황을 대비하고, 재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이어 이 기구는 이번 ‘재난 대비 회의’에는 북한의 기후 부서와 인민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북한 주민들 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 정화제, 주방 기구, 비상 대피품 등 구호품을 북한에 미리 비축해 두었다”고 밝혔다.

- 이 기구는 또, 조선적십자사가 구호품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들과 함께 긴급 상황 대처 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홍수 예방 사업 외에도, 국제적십자사는 50명의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식수, 위생 연수’을 펼치고 훈련과 준비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 이 연수에서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 식수 처리기’를 마련, 점검하는 방법이 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 또 국제적십자사는 ‘긴급 식수 처리기’를 한 대가 마련하면 하루에 식수 4천 리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약 250명의 북한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사는 3개도에서 각각 적십자사 200명의 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마을 기반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지난달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 의약품이 태부족이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국제적십자사는 “계속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후, 긴급 구호 지원과 장기 지원을 위해 대북 지원 사업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것이라면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 온실(그린 하우스)을 제공하는 산림 농업 사업 등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WFP, 8월 대북식량지원 전달 2배(8/3,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62만여 명에 약 3천230톤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주민에 제공한 식량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북한 주민을 위해 자체 생산한 영양강화식품이었다고 다미안 킨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 한 달 전인 지난 6월과 비교하면 지원을 받은 주민의 수는 약 63만 2천 명에서 62만여 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지원한 식량 규모는 지난 6월 1천528톤에서 지난달 3천231톤으로 100% 이상(111%) 증가했습니다.
 - 2013년 12월 3천775톤을 분배한 이후 18개월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 특히 올해 상반기 6개월의 월 평균 지원 규모 1천600톤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 킨 대변인은 전달보다 지난달의 식량지원이 늘긴 했지만, 지원 대상 18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2만 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면 예산 부족 상황은 여전하다고 덧붙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2013년 7월부터 2년 기한이었던 대북영양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려 했지만, 6개월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18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북한의 자강도를 제외한 8개도와 남포 구역 등 9개 행정구역의 69개 시·군이 지원 대상 지역임.
-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영양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기 위해 최소한 2천800만 달러의 추가 모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1억 6천800만 달러지만 3일 현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실제 모금된 금액은 약 8천290만 달러 가량으로 목표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스위스, 대북산림농법 재정지원(8/4,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 (SDC)이 지난 6월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 (CABI)의 대북사업인 산간농법전수를 위해 미화 약 16만 3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음.
- 스위스 정부는 2003년부터 언덕과 산에 나무와 작물을 함께 심는 ‘산간농업’을 북한에 전수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음.
- 특히 급경사지의 마구잡이식 개간으로 전체 북한 국토의 16%만 농사가 가능할 만큼 토양침식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스위스 식 산간농법 전수의 필요성을 강조함.
- 스위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북한에서 산간농법 전수사업을 진행 중인 농업생명과학센터는 10년 전부터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농업성, 평양농업대학 등의 기관들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음.
- 농업생명과학센터 관계자는 경사지를 활용한 경작이 북한에서 이미 실용적인 농사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지에서도 토지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산간농업’을 황해북도를 비롯한 시범사업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급경사지를 농토로 활용하면 산간지역 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산림 황폐화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음.

- 국제적십자사, 북한 주민 대상 홍수 대피 훈련(8/4, 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 IFRC는 이번 주 북한 3개도에서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 (Community-based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training)’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사무소의 힐러 구드온손 대변인은 2일 이번 훈련에 북한 주민들과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2백여 명이 참가한다고 말했다.
 - 구드온손 대변인은 국제적십자사가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 26일과 27일에는 평양에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재난 대비 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는 북한 긴급재난관리부와 기상수문국, 인민보안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음.
 - 조선적십자회는 구호품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긴급사태 대책(contingency plan)을 점검할 뿐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과 관련 논의를 하는 등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구드온손 대변인은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는 이밖에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식수 지원과 위생 훈련(Emergency Water and Sanitation training)’도 진행하고 있음.
 - 국제적십자사는 또 북한에 주민 2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세트를 비축해 놓았다고 말했으며, 구호물품 세트에는 수질 정화제와 조리기구 등이 포함돼 있음.

- WHO, 주북 중국대사와 보건지원 논의(8/5, 자유아시아방송)
 - 스테판 조스트(Stephan Jost) 세계보건기구 북한대표는 5일 평양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리진권 주북 중국대사를 만나 북한에 대한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고 주북 중국대사관이 밝혔다.
 - 조스트 대표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공중 보건에 관련한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 리 대사 역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사업에 기여하며 교류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리 대사는 중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 짓지 않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임산부와 어린이들과 관련한 공중 보건과 질병 예방에 애써주는 데 고맙다고 덧붙였다.

- 그는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민생 문제를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음.
 - 앞서 리 대사는 지난 6월 말 평양에서 유럽연합 방북 대표단과 만나 대북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평화발전 등을 도와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 리 대사는 전임 류홍차이 대사가 2012년 평양 룡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김정일 제1위원장과 나란히 놀이기구를 타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데 반해, 부임 4개월이 넘도록 김 제1위원장과 한 번도 면담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외면 받고 있음.
- WFP, 북한 서북지역 식량지원 집중(8/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북한의 지원 대상 9개도 중 식량사정이 가장 나쁘다고 평가된 함경북도과 량강도를 우선 지원했다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이 4일 공개한 ‘2015년 2분기 대북지원활동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에 63만 7천 명의 북한 주민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는데 량강도 10개군과 함경북도 19개군이 우선 지원 지역이었음.
 - 유엔이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조사해서 작성한 ‘2012년 전국영양조사’에서 서북지역의 두 개도가 식량 상황이 북한에서 제일 나쁘고 영양실조인 주민비율 또한 가장 높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함.
 - 학교 급식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던 영양 비스킷 생산도 줄었음.
 -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가동하던 7개 영양 비스킷 생산공장 중 5개 공장은 생산 중단 상태임.
 - 함경북도 청진과 량강도 혜산에 있는 공장에서만 이 지역 어린이를 위한 영양 비스킷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식량지원과 함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5개 지역개발 사업도 진행했으며 북한 주민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 4개도 1천372 헥타르의 산간지역에 7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5개 시·군에서 3건의 소규모 산림농법 사업도 진행했음.
 - 세계식량계획의 2분기 대북활동 보고서는 이들 사업을 통해 농경지 1천300 헥타르와 관개 수로 15km, 저수지 2개, 우물 240여 곳이 재정비됐다고 설명했다.

- 독일 NGO, 북에 유기농법 전수(8/6,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비정부단체 '유기농업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 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농법 체계를 보급하고 있음.
 -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고기,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유기농업연구소'는 이 외에도, 북한에 보다 생산성이 높은 복합유기농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음.
 - '유기농업연구소'는 지난해 유기농 사과를 재배하는 법을 연구, 전수하기도 하는 등 북한에 친환경 유기물을 이용해 채소, 곡물 등을 경작하는 다양한 유기농법을 전파했음.
 - 유기농 사과 사업은 한국의 한 농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됐으며, 올해 1월에 사업이 마무리됐음.
 -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돼 2년간 꾸준히 진행됐으며,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 유기농업은 적은 자본 투자로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고, 특히 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기농업 기술을 이용하면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임.
 - 이와 더불어, 이 단체는 평양 인근 농장에서 북한 농업 관계자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했고 북한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했음.
 - 앞으로 4년간 지속될 이번 사업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는 유기농업에 매우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유기농업 분야에서 해외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배우려는 데 큰 열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8. 북한동향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7.29)】 美 국무부의 '2015년 인신매매 보고서'(北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발표 관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우리(北)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의 적대의도가 노골화 될수록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7.29,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